남도김치로 본 버무림의 미학

문화향기



전남도립대 교수

'2023 빛고을 사랑 나눔 김장 대전'이 지난주 광주김치타운에서 마무리 됐다.

김장 대전은 개인이 사전 예약한 날에 주문한 절임 배추와 김치 양념으로 손쉽 게 김장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시스템화 돼 있었다. 김장 대전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인 배추, 소금, 고춧가루, 액젓은 로 컬농산물로구매하고세계김치연구소와 김치명인들이 함께 개발한 공동 조리법 (레시피)으로 김장을 했다. 이곳에서 김 장 경험으로 김치 체험의 즐거움은 물론 지역 상생의 지혜도 발현되어 남도 김치 도 최고, 지역 상생도 최고라는 생각으 로 기분이 좋아진다.

한국 김치는 K-푸드 시장에서 잘 알 려진 대표 브랜드다. 남도 배추김치는 신선한 국산 배추와 자체 개발한 양념법 을 이용해 만들어진다. 그 결과 김치는 깊은 맛과 독특한 향을 가지게 된다. 국 경 없는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이지만 우 리 배추로 절인 김장김치는 깊은 맛과 강 력한 에너지가 숨겨져 있다. 광주와 전 남은 김치 풍미를 극대화하며 전통 음식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. 광주김치축제 30주년이 되는 시점에 광주시는 세계김 치연구소와 함께 광주의 손맛을 더해 김 치가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. 전남은 식재료가 풍부해 김치 원·부재료 주산지로 김치산업클러스터

최적지라는 점에서 김치산업 육성을 위 해 생산 고도화를 강조하고 있다. 김치 는 전통 발효식품으로 소금에 절인 채소 에 젓갈과 고추·파·마늘 등 양념을 버무 려 담근 음식이다. 각종 무기질과 비타 민이 풍부한 김치는 영양학적으로도 우 수한 식품으로, 면역력 증진 및 바이러 스 억제, 항산화 효과, 변비와 장염·대장 암 예방, 콜레스테롤 억제, 동맥경화 예 방, 다이어트와 항암 등 효능이 있다. K -푸드 대표격으로 세계 김치 종주국으로 위상을 지켜 한국 김치산업 메카를 육성 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의 협력적 클러스 터는 필수적이다.

망설일 것도 없다. 김치는 원·부재료 를 섞어 발효시킴으로써 맛과 풍미를 나 타내는 동시에 원재료에 없던 새로운 영 양물질과 살아있는 많은 유산균을 섭취 할 수 있는 건강식품이라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. 김치의 건강 기능적 우수 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, 위생·안전성 이 보증된 고품질 김치 생산을 위해 요구 되는 핵심 원천기술 개발 등 광주와 전남 의 협력적 아이템은 차고도 넘친다.

김치 본향인 광주에서 남도김치를 알 리는 2023 김치대전이 열리는 날 축사의 한 대목에서 이색적이었으며 남도 김치 산업 발전에 울림을 주었다. "김장이라 는 공동체문화와 K-한류 핵심인 김장을 통해 발전된 나라가 되길 바란다"

해남산 배추 등 남도에서 키운 풍부한 재료와 광주김치연구소 레시피가 버무 려진 전통 발효기술과 독특한 맛을 전통 과 혁신을 결합해 한국 김치 문화의 역동 성과 융합의 지역 상생을 반영해 주고 있 다. 세계적인 대표 주자를 키우는 'K-푸

드의 대명사, 남도음식 글로벌화'에 대 한 지역의 부진한 대응은 지역 자체 뿐 아니라 전체 국가 성장 및 지역 균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등 자 원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새로운 지 역발전 광주·전남 시대를 열어야 한다. 인구감소를 겪는 지방소멸 시기에 교통 기반시설과 지역 교류인구 강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. 광 주와 전남 교통 기반시설을 연계 강화하 고 상호 방문하는 교류인구를 늘려 경제 공동체로 지방소멸을 막는 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인구감소 시대 효과적으로 대 응하게 된다.

광주와 전남이 열린 마음과 상생정신 이 있더라도 개별적・구체적 충돌을 해결 할 수 없고 결국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 는 실천적・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 다. 이를 위해 혁신이 가져온 난제를 해 결하기 위한 이해 관계자 간 담론문화 가 필요하다. 다양한 관점의 이해 관계 자 간 아이디어 공유와 대화를 통해 미 래지향적이면서도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결책, 각자도생으로부터 소외되는 가치가 미래 사회에서 존중받 거나 융합되는 가치가 미래 사회에 맞 게 변화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 될 수 있다.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 다. 접근방식이 제때 실행되지 않는다 면 기득권 보장이나 혁신 어느 것도 성 공할 수 없다. 올 한해 회자하는 지방소 멸과 수도권 메가시티 등 경쟁이 심화. 가속화 하는 시대를 맞아 광주와 전남 이 공동체 가치와 조화를 이루면서 미 래로 나갈 수 있는 공존의 미학이 우선 시 돼야 할 때다.

₩ **사**진으로 보는 세상

11일(현지시각) 볼리비아 베르사예스 의 이테네스강에서 사람들이 새끼 거 북 수천 마리를 방사하고 있다. 이날 베 르사예스 공동체 회원들은 사람들의 무분별한 거북알 소비, 불법 포획, 서식 지 감소 등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거북 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알에서 부화 시킨 새끼 거북들을 강에 방사했다.

베르사예스=AP/뉴시스

중동전쟁의 여파로 1970~198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 유파동은 한국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다.

한국은 1979년 3월 석유가격을 9.5% 올린 데 이어 1981년 11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무려 337%나 유가를 인상해야 했다. 석유 가격이 오르니 석유로 만들던 각종 화 학제품 재료 가격도 폭등했다. 당연히 소비자 물가도 급등 했다. 1980년 물가가 무려 40%까지 치솟았다. 1979년 10

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정 치적 혼란까지 겹쳐 1980년 한국 경제는 경제개발이 본격화한 1970년대 이후 처

음으로 마이너스 성장(-5.2%)을 하는 수모를 겪는다.

석유 파동은 전 세계에 큰 교훈을 남겼다. 중동 전쟁 당 시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 무기화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비 롯해 많은 국가들이 '자원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'는 의식 이 확산됐다.

한국은1980년부터 석유비축사업을 시작으로 40년간 전국 9곳에 비축기지를 건설했고, 1억 4600만 배럴, 전 국 민이 106일 동안 사용 가능한 석유를 저장해 두고 있다.

최근 국내에 제 2의 석유파동이 재현되고 있다. 세계 최 대 요소 생산국인 중국이 두 차례에 걸쳐 요수 수출을 막으



면서 국내에 '요소수 대란'이 현실화 되고 있다. 중국 해관 (세관)이 한국행 요소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. 우 리는 2021년에도 중국의 수출 통제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.

문제는 2년전 똑같은 상황을 거쳤음에도 정부가 전혀 대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. 2021년 당시 청와대 는 '요소수 대응 TF'까지 가동했다. 해외 수입선 다변화, 국내 생산 추진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됐다.이같은 대책으

로 2021년 중국산 수입 비중이 97%에 달 했다가 수입처 다변화 정책을 통해 중국 수입을 66%로 낮췄지만 올해 다시 90%

대까지 치솟았다.

석유파동의 교훈

글로벌 패권을 놓고 미·중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자원 무 기화가 노골화되는 형국이다. 단순 요소수 뿐아니라 지난 8월부터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, 이달부 터는 배터리 소재인 흑연의 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, 인 산암모늄 수출 중단 얘기도 나온다.

어느 나라든지 국내수요가 우선으로, 필요하면 인정사 정 없이 수출을 막는 게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이다. 석유 파동 당시 자원확보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.

김성수 논설위원

社 說

군공항 이전 협의 선택 아니고 의무다

오늘 전남지사 무안군수 회동

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산 무안군 수가 13일 도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만 난다. 당연히 관심은 '군공항 타협안' 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쏠려 있다.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된 지 어언 8개월.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이번 전 남지사와 무안군수의 만남을 통해 답 보상태에 빠진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이 해법을 찾아내길 기대한다.

김 지사는 지난 4월부터 '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 동시 이전'을 촉구하 면서 무안군수에게 거듭 대화 테이블 에 나서 달라고 요청해 왔다. 하지만 김 군수는 담화문으로 군공항 이전 반 대 의사를 밝히거나, 공식 행사에 불 참을 통보하는 등 반대 기조를 유지하 고 있다. 지난 5월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선 운항 취항식에서 만났지 만 김 군수가 환담을 피하면서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. 8월 택시관련 업무 협약과 11월 의용소방대 기술 경연대 회 등에서도 만남은 있었지만 기대했 던 군공항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.

광주 민간·군 공항 이전은 광주·전

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면서 무안국 제공항을 서남권 허브공항으로 육성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. 반쪽으 로 전락한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시 키기 위해서는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 이 필수적이라는 '사회적 합의'도 이 뤄졌다. 강기정 광주시장도 얼마전 기 자들과 만나 '무안공항을 거점공항으 로 키워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 다'고했다. 지난 4월 국가지원을 골자 로 한 군공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 면서 이전을 위한 판도 만들어졌다.

김 지사와 김 군수는 어렵게 마련된 이번 만남을 통해 군공항 이전의 물꼬 를 터야 한다. 광주·전남지역민의 '30년 숙원'이면서 국책사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소지역주의에 연연하 는 것은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. 광주와 전남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자치단체장이 만나 대화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도 어 불성설이다. 정치인은 유권자의 눈치 를 보는 것이 숙명이지만 지역의 더 큰 미래를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 릴 필요가 있다. 군공항 이전과 관련 된 협의는 선택이 아니고 자치단체장 의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.

의협 파업 접고 의대정원 확대 협력해야

17일까지 총파업 설문조사

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 하는 대한의사협회(의협)가 지난 11 일 총파업 설문조사를 개시했다. 설문 조사는 오는 17일까지 의사 회원을 대 상으로 이뤄진다. 의협은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'총파업'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당장 총파업에 돌입 하지는 않을 전망이다.

의협의 단체 행동에 들어갈 경우 사 실상 집단 휴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 실상 의료법에 저촉되는 진료거부나 다름없다. 의협은 지난 2020년 진료 거부에 나선 바 있다. 당시 의협의 주 축인 동네의원 휴진율은 6~10%에 그쳤지만, 전공의 휴진율이 70~80% 수준에 달했다. 정부는 즉각 수도권 전공의 일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 고 이를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를 고발했다. 다만 정부는 그해 의협 과 맺은 9·4 의정합의 이후 취하했다.

의협의 의대정원 확대 반대에도 불 구,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의견들이 나온다. 지역의료원이나 지 역 국립대병원 등은 보건복지부와 간

담회에서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 라고 수차례 강조했다. 보건의료노조 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.7%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. 전국 광역시·도가운데 의과대학이 없 는 전남은 의협의 총파업 움직임이 야 속하기만 하다. 그동안 전남은 의대 신설 움직임에도 의료계의 반발로 번 번히 무산돼 왔다.

최근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 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의과 대학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3900명 에 달한다.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정원을 결정한다는 계획이 다.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조차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 우지 못했고 지방의 필수의료는 말 그 대로 '고사 직전'에 처해있다. 특히 전남은 응급환자가 1시간 이내 상급 병원에 가지 못해 길 위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.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생명권을 차별받아서는 안된 다. 의사협회는 당장 지역 이기주의 를 벗고 의대정원에 찬성해 전남의 의 대신설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야 할 때다.

全南日朝 사장·발행·편집인 이 재 욱 논설실장 이 용 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(062)527-0015 경영지원팀 (062)510-0421 민주주의 구현 기사제보 (062)510-0331 광고영업팀 (062)519-0710 진실보도 실천 편집부 (062)510-0412 문화체육부 (062)510-0394 지역개발 선도 취재1부 (062)510-0380 온라인뉴스부 (062)510-0461 취재2부 (062)510-0336 사진부 (062)510-0391 www.jnilbo.com (062)510-0340 정치부 구독료 월 1만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-2호 (일간)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1부 500원

구독신청 (062)510-0471 광고문의 (062)512-0100 **FAX** (062)510-0436 **서울지사** (02)725-8890

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